

[**종합**]

BBK 검사 탄핵 소추안 표결 앞둔 검찰 겉으로 '신중' 속은 '부글부글'

임채진 총장 "소추안 발의는 검찰 중립성 훼손"

'BBK 의혹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검찰은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은 대통령직수호처 등이 '김경준씨의 입'에 근거해 수사상 문제점 등을 지적할 때는 '팩트(사실)'에 근거해 해명하면서도 탄핵 공방 등에 대해서는 일단 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할 말은 많고 속은 타지만 정치적 반응에 검찰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설명했다.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 부장검사들에게 의견을 낼 것을 주문하자 부장검사들이 이를 모아 12일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검사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 주되, '말꼬리 잡기' 식의 정치공세에 말려들 필요가 없으며 의연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당 측이 "이 후보와 김씨가 공동으로 영했던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씨의 메모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특별수사팀 최재경 부장검사는 "처음 보는 것이며, 김씨 주장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인데 지금까지 검사에게 제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의문"

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검사는 수사 결과와 공소장이 아닌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종 진실 판단은 재판 절차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검찰과 법원을 믿고 지켜봐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같은 날 "검사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문제삼은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선에서 검찰총수로서의 입장을 나타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정치적 수사는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며 김씨가 검사에게 '형량 협상'을 시도한 부분의 녹취록을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오기는 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도(正道)가 아니다.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낱말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누르고 겉으로 평온한 모습을 보이면서 14일의 표결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틀째 회의가 13일 판문점 남북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회담 시작 직전 북측 실무자가 남북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북측 요구안이 담긴 지도를 프로젝트로 투사하자 남측 실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프로젝터 막아!" 남북 장교들 몸싸움

北 '비공개' 깨고 어로구역 설명하려다 마찰

남북은 13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몸 싸움을 벌이는 등 한 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소동은 북측이 전체회의에 앞서 남측 방송사 기자들이 모두발언을 할영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등에 관한 입장을 빔 프로젝터로 설명하려다가 빔이

북측은 오전 10시경 회담장에 설치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전격 띄운 것. 이에 대해 남측 대 표들은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빔 프로젝터를 가동한 것은 회담을 비공개로 하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전원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남측 지원인력인 김모

해군소령이 전원을 끄려고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곳으로 다가가자 북측의 한 수행원이 김 소령의 몸을 두 차례 밀치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몸 싸움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고 오전 10시에 시작하려던 전체회의는 30분 늦게 시작했다.

앞서 북측 단장(수석대표인) 김영철 인민군 중장(남측 소장급)은 개성공단 3동(동행·동신·동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를 등 첫날 회담 결과를 남측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북측 대표단의 입장이 곤란해졌다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檢 비자금 주력 "경영권·로비 수사는 특검에"

'에버랜드 재판 증인 조작' 의혹 김 석 부사장 소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석 삼성증권 부사장을 최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특검이 도입될 때까지 '3대 의혹' 가운데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정·관계 로비 등 나머지 두 부분은 특검에 본격 수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13일 브리핑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와 관련해 김 석 부사장을 일요일 조사했다"며 "김용철 변호사가

에버랜드 재판을 둘러싼 '증인 조작' 의혹을 제기해 일부 확인할 게 있다고 판단해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및 이재용씨의 CB 인수 작업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로 당시 그룹 비서실 재무팀 이사였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실무자급 약간 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국제정보로부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세무조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차장검사는 "지금은 비자금 조성·관리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승계권 분야는 전

"북극 빙하 5년 뒤 모두 녹을 수 있어"

북극 빙하가 5년 내에 모두 녹아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미 항공우주국이 지난 12일 공개한 최신 위성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북극 빙하의 전체 부피는 4년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빙하의 표면적도 전년 대비 23%나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그린란드의 대륙빙하는 지난해보다 190억t 늘어난 5천250억t이 녹았다. 이는 여름철 평균 용해량보다 15%나 많은 양이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6~7m 가량 상승하게 된다.

그린란드에서는 표면빙하 역시 최악의 용해 사태를 기록했던 2005년보다도 12%나 더 녹았다. 워싱턴 D.C.를 800여m 길이로 덮어버릴만한 양이다.

특히 그린란드의 빙하 용해는 악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태양열이 바다로 흡수돼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이렇게 덥혀진 바닷물은 빙하 용해 속도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체적으로 특검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방위 로비' 의혹도 '로비 의혹은 '드러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현 단계에서 사실상 더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두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특검에 맡기겠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차명 계좌 명의인 130여명의 1천여개 계좌에 대해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계좌 명의인이나 추적 계좌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 계좌 7개 중 3개는 삼성증권 계좌이며 나머지 계좌 중에는 연결계좌가 일부 포함돼 있어 입출금 내역을 분석 중이다. /연합뉴스

금품수수 前 청와대 비서관 '늑장 출금'

조광한씨 미국행...경찰 방조 의혹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광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한 바로 다음 경찰이 뒤늦게 출국 금지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출국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해 2005년 6월경 서울 S호텔 K유류주점 입주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관해 일부 시인을 받아 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피의자를 출국 금지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찰은 12일 오후에야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전날인 11일 오후 7시 48분 대한항공 KE 085편을 타고 미국 뉴욕으로 떠난 뒤였다.

허영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출국 후 전산망에 뜨는 데 3일이 걸리므로 확인을 못 했고 아직도 출국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 자치구 살림살이 '숨통'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 급증

사회복지비 부담 줄고 교부금 늘어

내년 광주지역 5개 구의 살림살이가 사회복지비 부담이 줄어든 대신 재정조정 교부금은 늘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에 따라 내년도 5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총 333억원이 줄어든다.

기초생활급여(차등보조)의 경우 기존 80% 국비 비율이 90%로 늘어난 대신 시비는 10%에서 7%, 구비는 10%에서 3%로 줄어 자치구의 기초생활급여 감소액은 11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동구 10억원, 서구 20억원, 남구 14억7천만원, 북구 42억8천만원, 광산구는 25억6천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보육사업(차등보조) 역시 국비가 50%에서 60%로, 시비는 25%에서 28%로 각각 10%포인트, 3%포인트 늘어난 반면 구비는 25%에서 12%로 13%포인트나 감소돼 자치구 부담 감소액은 16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부담 경감은 동구 10억원, 서구 29억원, 남구 17억4천만원, 북구 51억7천만원, 광산구 52억3천만원이다. /재희총기자 chae@kwangju.co.kr

3년새 면적 16배나...농가수도 늘어

전남도가 2005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도점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온 결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수와 인증 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는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 실시 직전인 지난 2004년 4천60가구에서 2005년 1만 5천752가구, 2006년에 3만1천544가구, 올 11월 말 현재 6만 9천438가구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지난 2004년 경지면적의 1.3%인 4천57ha에서 2005년 1만 3천772ha, 2006년 2만 9천431ha로 늘어난 데 이어 올 11월 말 현재 경지면적의 20.8% 수준인 6만 5천619ha로 지난 2004년에 비해 무려 16배로 늘어났다.

인증 단계별로 보면 친환경농업 초기 실천 단계인 저농약이 지난 2004년 2천650ha에서 올해 11월 말 현재 5만 2천806ha로 20배 가까이 늘었고 저농약에서 2~3년 걸쳐 진입하는 무농약은 지난 2004년 991ha에서 올해 11월 말 현재 1만 824ha로 11배 가까이 늘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기본서 이론 **최정민** "첫진도 시작반"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광주고시학원

문의: 227-0000, 227-0001, 227-0002, 227-0003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상주점 ☎ 361-8111, 361-8112
대구점 ☎ 629-8111, 629-8112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일선 전국 수석 2명 최정민 박정민

개강 **1월 2일** (4주)

기본서 이론 **최정민** "첫진도 시작반"

국무무 (18회 수석 2명)

새로 행정고시학원

문의: 301-0111, 301-0112, 301-0113, 301-0114

고객감동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애니체

애니체는 100여종의 다양한 사무용 의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Anych 사무용 의자, 사무용 가구 전문 (062)942-1814, 1816